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의안 번호	4851
----------	------

발의연월일 : 2024. 10. 23.

발 의 자 : 장경태 · 이건태 · 전현희
박선원 · 박균택 · 민형배
문정복 · 부승찬 · 김동아
김승원 · 한민수 · 서영교
박지원 · 이성윤 · 김원이
문금주 · 이정현 의원
(17인)

주 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자행한 허위진술 강요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검찰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자리와 형량거래 등 회유책을 사용하였다는 의혹

2.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등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형량을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
3.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모아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수십여차례 열었다는 의혹
4.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권 휘하의 검찰이 야당 대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자금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용’ 내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임.

국정원 생산 2급기밀 문건인 「○○96○○ 종결 계획」,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대한 제1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고합882 판결」, 그리고 수원지검이 직접 작성한 「수사보고【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 -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등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규모 자금을 보낸 이유는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음. 즉, 계열사 (주)

나노스를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주가를 급등시키려 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금의 성격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용’ 내지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규정하였고, 모든 증거와 정황을 그에 따라 끼워 맞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는 모두 윤석열 정권의 정적이자, 제1야당의 대표를 표적 삼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였다는 평이 지배적임.

그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형량거래를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유하려 들었으며, 다른 사건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형량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진술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그들 상호 간의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로써 당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현저하다고 할 것인 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당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본 안을 발의하기에 이른 것임.